고용노동부 보도반박자료

보도시점 2025. 11. 27.(목) 배포 즉시

정부는 감독행정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독권한 지방위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□ 11.27.(목) 국민일보, “산재사망자 느는데... ‘근로감독 지자체 위임’ 밀어붙이는 정부”, “산재 증가하니 감독 책임 어물쩍 지자체로 넘기려 하나” 기사 관련

2. 반박 내용

□ **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** 근로감독 행정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, **근로감독 권한의 지방위임**을 **국정과제**로 **추진** 중임

○ ILO **협약**에 따라 **중앙정부**가 근로기준 적용의 전국적 **통일성·일관성을 유지·관리**하면서, **지방정부**가 가진 **지역 네트워크, 종합행정 등 강점을 활용**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임

□ 근로감독 권한 지방위임은 **중앙-지방의 긴밀한 협의하에** 지방의 여건과 시행 희망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, **단계적으로 추진**할 계획임

○ 특히,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**중앙-지방정부가 함께 감독 역량을 집중**하여 **촘촘한 감독 체계를 갖추고자** 하는 것임

○ 즉, 지방정부에게 30인 미만 사업장을 **전부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**, 지방정부의 의지, 능력, 위임 효과 등을 고려하여 매년 **중앙-지방 사전 협의를 통해 일부를 선정할 예정임**

○ 실행방안 구체화 과정에서 **지방정부의 의사와 여건 등을 고려**하여 **착수 시기를 조정**하고 있으며, 4개 지역이 먼저 착수하고 **나머지 지역 역시 추진을 희망**하고 있음

□ 지방 정부, 관련 협단체, 민간 전문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감**독행정을 혁신**하고 **산업안전과 노동법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**기 위해 **최선의 노력**을 다하겠음

담당 부서	안전보건감독국 안전보건감독기획과	책임자	과 장	배영일 (044-202-8901)
		담당자	사무관	강숭훈 (044-202-8914)
담당 부서	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협력과	책임자	과 장	구현경 (044-202-7821)
		담당자	사무관	손우진 (044-202-7822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